

주식 기업에 액수액이 20% 줄고 임원들의 접대비 전액 한도 액도 종전의 1/4 정도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국내 한 재벌그룹 회장비서실 홍보팀에 근무하는 김아무개 차장(37)의 말이다.

실명제 실시 이후 비자금 조성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각 기업들은 기존의 비자금 처리는 물론 향후 비자금 관련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에서 흔히 ‘기밀비’로 불리는 비자금의 주요 쓰임새는 각종 리베이트를 포함한 로비자금과 기부금, 접대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한 기업의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아는 사람은 사장이나 자금담당 중역 등 극소수일 정도로 극비사항이다. 비자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처리되는 접대비 허용액의 최고 수신택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당장 고민은 가·차명 형태로 관리해온 비자금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국내 굴지의 재벌그룹사의 한 간부는 “대부분의 기업 비자금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많은 가명보다는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다”면서 “실명제환

하기 때문에 계속 대책회의를 열고 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명계좌를 법인 명의로 실명화시킬 경우 그만큼 과거 어느 시점에서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와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비자금 규모가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기업의 도덕성에 치

고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기업들이 연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는 기본 6백만원(중소기업은 1천2백만원)에 자본금(50억원 한도)의 2%, 매출액의 0.1%(중소기업은 0.2%)를 각각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5백억원에 매출 9천억원인 기업의 경우 1년간 손금처리될 수 있는 접대비는 10억6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기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즉 들어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업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단약 비현실적인 현행 법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키면 결국 실명제하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비자금 조성방법이 개발될 수밖에 없는 데 그럴 바에야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기업들이 그 동안 짊어졌던

기업들 접대비 축소비상

비자금 출처조사 피해 실명화 늦출듯 접대비 손금처리 허용액 확대 요구도

명상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기업으로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사실상 실명과 구분이 안되는 차명계좌는 그대로 놓아두고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자금을 인출해 기업주의 이름으로 실명화하는 수법으로 국제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모면할 것이라는 게 기업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예상이다.

기업들로서 훨씬 어려운 과제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비자금 조성은 어려워졌는데 쓸 데는 여전한데

로비자금과 손님 접대비로는 터무니 없이 적은 액수이고, 결국 매출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었다. 특히, 기업 소유주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나오는 대책이 씹씹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출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법적으로 허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대

국장은 “일본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접대비의 손금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듯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접대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납품을 하면서 접대비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만큼 다소 한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업들은 실명화시대를 맞아 음성적인 경비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청된다는 것이다.